

“20년 기다림 지쳤다…재개발 지정 취소해 달라”

광주 북구 중흥동 주민들, 시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취소 요구
사업 정체에 건설경기 침체 겹쳐 철회 결정…주민간 갈등만 격화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스스로 재개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 광주시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20년 가까이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스스로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 북구는 10일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748번지 일대에 지정된 ‘중흥구역 재개발사업’ (면적 2만3131㎡)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를 광주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115명 중 59명)이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 구역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곳은 지난 2006년 광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재개발사업 진행 첫 단계로,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안전과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광주시에서 지정한다.

토지 소유자들은 지정된 해에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관심도 저하 등의 이유로 겹치면서 지난 2021년까지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최근 광주지역에서 대형건설사 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지난해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국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 철회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주시가 재개발 구역 지정만 해놓고 방치해 주민들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

적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7일 오후 방문한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이야기만 꺼내도 고개를 저었다.

일부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재개발 사업 대신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일반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표를 지난해 11월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갈등만 증폭됐다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이 20년 가까이 정체되면서 고령의 주민들은 “이제 와서 어디로 이사 가느냐”며 재개발 사업 반대로 돌아섰고, 젊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민들은 행정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요구하면서 투표 결과도 완전히 반으로 나뉘었다.

인근에서 10여년째 복사집을 운영하는 김지훈(54)씨는 “같은 집안 내에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은 재개발을 거부하지만 자신들은 재개발을 원하는 등, 재개발 여부를 놓고 마을 전체가 완전히 두쪽으로 갈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1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며 “투기꾼이 들어왔거나, 추진위원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등 별별 소문이 다 돌면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웃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민 신경석(87)씨는 “재개발이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지쳤다”며 “재개발의 ‘재’자도 듣고 싶지 않다”고 손사래를 쳤다.

한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란 소문에 외부인 등이 빈 집을 샀다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마을 전체가 흉흉하게 변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지역에서 20여년째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은 “재개발을 믿고 낡은 집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지쳐 지난 2018년에 새로 고쳤다”며 “재개발 초창기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주변 빈 집을 많이 샀는데,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방치돼 지역 전체가 으스스한 편이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다른 재개발 구역은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해당 구역은 새장 모양으로 사업성이 없어 건설사가 들어 오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며 “다른 재개발 단지와 비교해봐도 구역이 작아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마을이 슬럼화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재개발 사업에 시가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10년에 한번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5년에 한번씩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2006년 당시 재개발 사업을 아직까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침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비예정구역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는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지난 17년 동안 어떠한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 해당 규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해명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노후된 상수도관 누수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7일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서 “도로에 물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긴급 보수를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하에 매설된 지름 13mm 급수관이 노후화돼 물이 새면서 도로까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결혼식 축의금 얼마? ‘직장동료’ 5만원… ‘친한 친구’ 10만원

인크루트, 인식 조사

결혼식 축의금으로 ‘알고 지내는 정도의 직장 동료·친구’에게는 5만원을, ‘친한 친구·지인’에게는 10~20만원을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는 지난달 15~19일 전국 1177명의 대학생·구직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관계별·상황별 결혼식 축의금 적정 액수, 모바일 청첩장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일 경우 결혼식 축의금 5만원을 내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다.

또 ‘사적으로도 자주 소통하는 직장 동료(전 직장 포함)’의 적정 축의금은 10만원(63.6%)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 동호회 회원 등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에 대한 축의금은 5만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63.8%, 10만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20.6% 수준이었다.

반면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지인’에게는 10만원(36.1%), 20만원

(30.2%), 30만원(14.4%) 등 순으로 응답했다.

‘모바일 청첩장’에 대한 인식 조사도 이뤄졌다. 친하지 않거나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낸다면 74.3%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46.6%는 축의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친분이 있거나 꾸준히 연락해왔던 지인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냈을 경우에는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91.3%에 달했다. 다만 참석 의사를 밝힌 이들 중 6%는 ‘축의금을 적게 낼 것’이라고 답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주차빌딩 추진 48억 투입 100대 수용 규모

광주시교육청이 극심한 청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별관 뒤편 교육정보원 앞 주차장 부지에 48억원을 들여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철골 구조 주차빌딩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직원 수가 500여명인데, 주차면수는 232면에 그쳐 민원인 차량까지 포함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차량을 청사에 주차하는 못하는 직원 50명에게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료 8만8000원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6~11월 계획 및 설계 용역을 거쳐 12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대 허승준 신임 총장 임명

임기 4년…30일 취임식

광주교육대학교는 제8대 총장으로 특수통합교육과 허승준(사진) 교수가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허 총장은 1992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철학박사(특수교육) 학위를 받았다.

2002년 광주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로 임용돼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통합교육지원센터장, 영유아교육지원센터장,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상담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자문단 자문



위원,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 전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 운영위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허 총장은 “새로운 미래 100년의 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힘을

모아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대학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의 취임식은 오는 30일 광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린다.

허 총장의 임기는 2027년 3월 5일까지 4년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 목 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 목 장 의 장 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